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

대한상의·국세청 간담회

국세청장 “세정지원 추진 속도”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납세자에 성실신고자료 등 제공

국세청은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를 실시하는 등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회관 이그제큐티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안·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실시와 청년고용 시 우대,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 부담 최소화, 외국 과세당국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제출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낱알이 심해져 가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올해 초에 국세청에서 마련한 국제 행정 개혁방안에 상의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국세청에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중

합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오늘 건의 드리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주시면 저희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R&D 세액공제와 관련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외에도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기업 2곳 중 1곳 ‘투자의향 없다’… 중소기업조사 ‘한파’

(4분기)

중기중앙회, 전국 300곳 조사

이유 ‘투자여력 없음’ 42% 달해 ‘해외공장 설립 계획 있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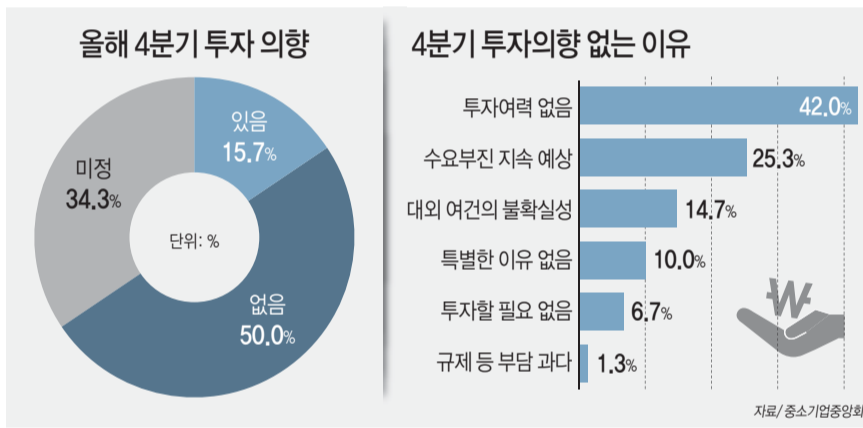
중소제조사들의 투자에 벌써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모습이다.

2곳 중 1곳이 올해 4·4분기 중 투자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미정’이란 기업도 34%에 달했다. 10곳 중 8곳이 투자여력이 없거나 수요부진, 대내외여건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4분기에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건비가 싼 점 등 노동조건이 국내보다 양호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중소기업업체들은 여전히 많다.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에서 기회를 찾겠다는 기업들이 많은 셈이다. 국내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요원해지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도권 145개를 포함해 전국 300개 중소기업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올해 투자 실적과 4분기 전망 등을 조사해 1일 내놓은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0%가 올해 10~12월 사이 투자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미정’이란 답변도 34.3%였다. ‘투자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매출과 종업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기업일 수록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절반의 기업이 ‘투자 의향 없음’을 밝힌 가운데 주요 이유로는 ‘투자여력 없음’(42%), ‘수요부진 지속 예상’(25.3%), ‘대외 여건 불확실성’

(14.7%) 등을 꼽았다. 응답 중소기업들은 동종업계의 4분기 투자수준에 대해서도 ‘암울’하게 보고 있었다.

경쟁사들의 전년 동기 대비 올해 4분기 투자수준 예측을 물어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축소’가 49.7%로 절반에 가까웠던 반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는 고작 3.0%에 그쳤다.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란 답변은 46.7%였다.

반면 300곳 중 47곳이 4분기내에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설비 확장’이 44.7%로 가장 많았다. ‘신규 생산 설비 도입’은 34%였다. 이외에 ‘기술·연구개발’(31.9%), ‘기존설비 교체 및 보수’(29.8%)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해외 공장 등에 대한 추가 설립 계획 등에 대해서 11%의 기업이 ‘있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로는 ‘인건비·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이 국내보다 좋아서’(30.3%), ‘거래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동반진출’(30.3%)을 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사들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으로 ‘내수활성화’(63%)를 주문했다. 다음으로는 ‘고용안정·인력난 해소’(32.7%), ‘자금조달 경로 다각화’(32.7%) 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기 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는 ‘금리 인하’가 58.7%로 가장 많았고, ‘개별소비세 인하’(30%), ‘관광·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대’(26%) 등이 뒤를 이었다.

/김승호 기자 bada@

해수부

자원검색·분양신청·확인 ‘온라인 통합분양서비스’

해양수산부는 10월부터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자원 검색부터 분양신청,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분양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시하는 온라인 통합 분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서식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원 분양신청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해볼 수 있다.

또한, 매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분양 신청자뿐만 아니라 해수부, 기탁기관, 책임기관 등 업무처리자에게도 동일하게 알림·조회 서비스가 제공돼 빠른 분양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생명자원 분양 서비스는 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해양생명자원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기탁등록보존기관 등이 확보한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자원은 해양포유류인 각종 상어를 비롯해 산호, 말미잘, 플랑크톤, 해양미생물 등 약 6800종에 달한다.

지금까지 해양생명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직접 수기로 각종 서식을 작성해 기탁기관이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 또한, 신청 후에도 승인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고 전자우편 수신 오류 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 불편함이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연구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서비스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사해 왔다.

이후 조사결과를 반영해 시스템 설계와 개발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이번 통합 온라인 분양이 시행되면 해양생명자원의 신청부터 배송완료까지 소요기간이 기존 3~4주에서 1~2주로 단축돼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최신용기자

“외교부·재외공관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을” 반려동물 등록률 34%… 제도 ‘유명무실’

5년간 해킹 등 시도 4.2만건 달해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해킹 및 사이버 공격 시도가 최근 5년간 4만 200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사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교부에 대한 해킹 및 사이버공격 건수는 총 4만 2096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171건이었던 해킹 및 사이버공격은 2016년 8482건, 2017년 14,19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6월말 현재 522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메일계정 탈취시도 및 해킹메일 수신 9198건(2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인가 접근 시도 9049건(21.5%), 홈페이지 해킹시도 7275건



(17.3%)순이었다. 해킹에 이용된 IP국가별로는 중국이 1만6,113건(60.7%)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3621건(13.6%), 한국 내부 1702건(6.4%)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교부는 이같은 중국의 해킹 건수 증가 이유에 대해 “2017년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다소 증가하였는 바, 이는 사드배치 관련 3월경부터 시작된 중국 해커의 우리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킹의 경우 해커가 여러 해킹 경유지를 거쳐 공격을 시도하고 있어, 정확한 발신지를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동 국가들로부터의 해킹 건수가 증가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봉재영 기자 bcy2020@

시행 5년·예산 32억원 집행 미등록자 37% ‘필요성 못느껴’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됐지만 작년말까지 등록률이 33.5%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2014년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시행 이후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2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신규동물등록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등록현황(누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17만5516마리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 중 33.5%만 등록을 마쳤고 66.5%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었다. 미등록 응답자의 37.2%가 등록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대답했고, 다음으로 ‘등록제 미인지’ 31.3%,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 복잡’ 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대상 미등록에 따른 단속이나 행정처분도 극히 미미했고 홍보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지난해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처분이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